



| 지상포럼 | 충청남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의정발전 세미나

충청남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의정발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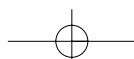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정연정 | 배재대학교 교수

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자체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볼륨적 요소, 지식적 요소, 기술적 요소, 행태적 요소 등 4가지 요소를 기본 맥락으로 의원 개인의 전문성 향상 뿐만 아니라 의회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볼륨적 요소로는 파트너십을 활용한 전문성 지원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활동영역에 근거한 다양한 외부 전문가 집단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식적 요소로는 충남도 의회 지식관리 및 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는 현재 충남도 의회의 의회 전반 업무, 의원상임위 활동 및 지역구 활동, 의회 내 의결상황, 자치단체 사업과제에 대한 행정지침, 조례, 담당 공무원의 업무내용 등을 시스템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식관리 시스템 확보가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술적 요소는 의원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의원 학습조직을 활용하여야 한다. 행태적 요소로는 조직진단과 핵심업무 중심의 기구를 형성하여야 한다.

광역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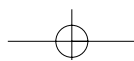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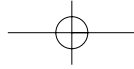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박재정 | 충남대학교 교수

세계화시대 탈주권의 글로벌거버넌스가 전개되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세계화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선거, 지방정당, 지방의회라는 민주적 통제장치의 어느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민주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시대 지방정부는 지방이 주체가 되고 단위가 되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지방의회는 지방의 세계화 전략으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부정적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반영, 조정, 통합함으로써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 기관에 균등한 권한배분이 확보되어야 하고, 법률상 범위와 한계 등의 권한의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양 기관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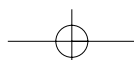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 지상포럼 | 충청남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의정발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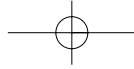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도내 저수지등의 수질개선대책

이영신 | 한서대학교 교수

2006년 현재 도내 저수지는 1,009개이며, 대전·충남지역의 저수지 평균 COD농도는 전국 평균 5.5mg/L를 상회하는 7.5mg/L로 수질등급상 4등급에 머물고 있다. 2004년 저수지 62개소, 담수호 4개소 등 총 66개소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측정 조사에 따르면, 2등급이 2개소, 3등급이 23개소, 4등급이 17개소, 5등급이 8개소, 등급외가 15개소로 전체의 34.8%인 23개소가 수질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농림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보고서, 2004) 이에 따라 용수목적에 따른 이용을 위한 저수지의 수질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호소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호소유역 내·외부 오염원을 최대한 삭감하고,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오염물질 제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호수 내부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호외 수질개선방법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수생식물식재, 축산공공처리시설 정비, 마을하수도시설, 전저수지 설치, 농경지배수관리 등이 요구된다. 호내 수질개선방법으로는 인공섬 조성, 퇴적물 준설, 염수배제, 인공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강제순환 등의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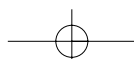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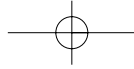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박 경 | 목원대학교 교수

한·미 FTA협상에서 쌀에 양허관세율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관세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 총 연간 피해액은 9,901억원,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에는 약 1,42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미곡, 식용 콩, 돼지, 한우, 포도, 사과 등의 피해액이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별로는 쌀을 포함할 경우 당진이 1천 3백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서산, 예산, 아산 등의 순이다. 한편 쌀을 제외할 경우 천안시가 가장 피해액이 크고 다음이 예산, 홍성, 아산 순으로 피해액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충남 농어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시군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기구나 대책반을 마련하여 충남의 이해를 반영한 협상의제 설정을 중앙당국에게 요구하고, 도내 피해 최소화과 구조조정의 대책 마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구조조정, 농산물 수출의 확대와 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





| 지상포럼 | 충청남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의정발전 세미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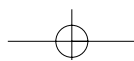
최병학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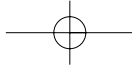
현재 의용소방대는 많은 사회봉사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탄력성 있는 활동을 위한 기본이념의 제시가 미흡하여 지역방재 중심조직 및 민간 안전문화운동 리더로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이미지제고 수단이 미흡하다. 셋째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중앙단위의 협조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현행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설립 근거 없이 구성된 임의단체로 전국의용소방대의 지원협조 및 독자적인 사업추진력이 미흡하다. 다섯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정규 소방력 부족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용대책이 미흡하여 급속한 소방수요 증가 및 의무소방원 감축에 따라 정규 소방력을 대체할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방안이 시급하다. 여섯째, 여섯째, 확실적인 조직운영으로 지역적 활동수요·특성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조직구성이 이루어져 소방서장 보조업무 수행으로 타율적 조직활동에 머무르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예산운용과 교육훈련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사기진작이 요구된다. 의용소방대원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급, 정기산업시찰, 출동비 현실화 및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처럼 후생복지 제도가 확대되어야 하고 21세기 정보화에 걸맞게 국내 중소도시나 외국과의 교류, 우수기업체 연수, 저명 인사 초빙강연 등 사회적 참여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직역할 및 편성의 효율화를 위한 지역특성에 따른 조직역할 및 편성방향의 재설계는 소방활동단 위와 생활권을 고려한 조직편성이 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 설치권자와 예산부담자의 재설정으로 시·도 지사가 설치 및 소속대원을 임명하고 필요예산을 부담토록 해야 하며, 다만 광역단체의 재정상 예산부담이





CHUNGNAM FORUM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활동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조직운영관리체제의 확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운영체제의 구축 및 지도부 구성의 합리화가 요구되며,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독자적 사업추진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